

**참고****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Q&A****I. SOC 확충****1-1 광주~영암 초고속도로**Q. 광주~영암 초고속도로 추진 일정은?

- 초고속도로 연구용역을 금년 3월 발주 요청하여 5월 착수할 예정이며, 전체 용역 준공은 내년이나, 금년 말까지 초고속도로 관련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
- 해당 용역에서 도로 폭, 곡선반경, 안전시설 등 설계기준 마련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안전성 등도 검토할 계획

**1-2 전남 교통망 개선**Q.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?

-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으로, 2023년 12월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올해 2월에 기재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음
-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

## 1-㉓나주시 치수사업

### Q. 하천정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 내용은?

- 나주1지구, 나주2-1지구 및 지석천 오계지구 사업은 모두 하천제방의 여유고 및 독마루폭이 부족하여 홍수에 취약한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, 하천 제방 보강이 주된 내용임

\* 영산강 나주1지구(여유고 최대 1.5m 부족, 독마루폭 최대 1.1m 부족)  
 영산강 나주2-1지구(여유고 최대 0.95m 부족, 독마루폭 최대 1.4m 부족)  
 지석천 오계지구(여유고 최대 0.2m 부족, 독마루폭 최대 0.5m 부족)

- 해당 사업은 현재 발주가 완료되어 금년 7월경 시공사 선정 완료 후 하반기부터 하천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

### Q. 배수영향 구간 사업은 언제 시행되는지?

- '23년 8월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국가가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, 전체 411개소 중 나주시 관내 배수영향구간 하천은 12개소가 해당됨
- 일부 하천은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(수해복구 사업 등)이 이미 이뤄진 경우도 있어, 국가는 하천별로 홍수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

## Ⅱ. 항만개발과 우주항공산업

### 2-① 광양항 개발

#### Q. 광양항 스마트항만 조성 계획은?

- ‘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’은 2021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터미널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·시공 일괄입찰방식\*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2023년 7월 기초자료조사를 완료

\*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(‘22.2)를 통해 설계·시공 일괄입찰방식(턴키)으로 심의·의결

- 자동화를 위한 하역장비에 대해 2023년 12월 안벽크레인 발주를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야드크레인, AGV 발주를 완료할 예정이며,
  -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 발주도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임
- 기반시설 공사와 단계별 장비 제작을 통해 2027년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, 2029년까지 전체 컨테이너터미널을 구축·운영할 계획임

#### Q. 광양항 배후산업 지원 계획은?

- 광양항 개발과정에서 조성된 항만 배후부지 655만㎡을 석유화학, 에너지, 신소재 등 산업·물류용지로 조성·공급하여 배후산업을 지원할 계획

\* 울촌 융·복합 물류단지 332만㎡, 묘도 LNG에너지 허브단지 312만㎡, 북측 배후단지 11만㎡

- ’26년부터 산업·물류용지 123만㎡을 우선 공급하고, ’30년까지 총 655만㎡를 제공하여 여수국가산단 등 배후 산업단지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음

**2-2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**Q.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?

- 작년 8월에 ‘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’(’24~’31, 총 6천억원)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음
  - 현재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총사업비가 확정될 것임
-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으로 올해 100억원이 반영되어 있어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겠음

**Ⅲ. 남도의 문화, 관광****3-1 남부권 광역관광개발**Q1. 이전 광역관광개발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의 차이점은?

- 기존 광역관광개발계획은 공급자 위주의 지역별 관광인프라 조성·확충에 집중하였다면, 수요자 입장에서 최근의 관광 트렌드를 반영함
  -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‘하루 더 머무는 여행지 조성’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,
  - 수요자 입장에서 최근의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휴양·치유·일상 여행 중심 체류형·체험형 시설을 확대하고 관광 스토리텔링과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여 남부권만의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관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음

## Q2.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관련 해당 지역은 자연보호구역이 많아 개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?

- ☐ 사업 입지 결정시 보호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제외\*하고,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부지로 선정함

\* 생태자연도 1등급(자연환경보전법), 공원자연보존지구(자연공원법), 산지 5영급 구역(산지관리법), 상수원보호구역 1km내외 집수구역(상수원관리규칙) 등

- 사업 추진 시 친환경 공사 기법의 적용, 이용자 동선(이격) 거리 조정 등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음

### 3-②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

## Q.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은?

- ☐ 당초 원도심 내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으나, 원도심, 순천만국가정원을 선호하는 기업 요구 등으로 순천만국가정원과 원도심 내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 중임

(순천시, '24.3월중 문체부에 사업변경 신청 예정)

- ☐ 3월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여 6월 심사 결과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하여 10월까지 기업 입주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임

### 3-㉓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

#### Q.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혜택 및 향후 일정은?

- 문체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,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통한 문화 균형발전을 추진
  - 이를 위해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‘25년부터 ‘27년까지 3년간 도시당 최대 200억원(국비 100억원, 지방비 100억원) 지원할 계획임
    - \* (‘24년) 광역연계형 앵커사업에 도시당 국비 2억원 및 예비사업 컨설팅 지원
- 작년 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올해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문체부는 해당 지자체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
  - 이후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심사를 거쳐 2024년 말에 최종 ‘대한민국 문화도시’를 지정할 방침

### 3-4 고향사랑기부제

#### Q.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는?

□ 시행 첫 해인 작년에 예상보다 많은 약 650억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, 법률 제정 당시 우려되었던 모금강요 등의 부작용도 없어 제도가 안착 단계에 도달

□ 제도가 목표로 한 지방재정 확충, 지역경제 활성화, 지역문제 해결, 나눔문화 확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

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, 인구 감소지역의 적극적인 모금활동으로 많은 모금액이 집중되어 지방재정 확충 성과

- ▶ <재정자립도 비교> 20% 미만 지자체 3.35억 원 (**약 1.9배**)  
vs 20% 이상 지자체 1.74억 원
- ▶ <인구감소지역 비교> 89개 인구감소지역 평균 3.8억 원 (**약 1.9배**)  
vs 그 외 154개 지자체 평균 2.0억 원

② 지역 소상공인과 농·어민의 답례품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달성 중

※ 답례품별 구매액 : 농축산물(51억 원), 가공식품(34억 원), 지역상품권(18억 원), 수산물(8억 원) 등

③ 지방정부가 기부금으로 지역의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등 지역문제 해결에 사용 중

- ▶ (전남 곡성군) 지역내 소아과 병원 확충을 위한 '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' 사업 ('24~)
- ▶ (울산 동구)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 추진('24.~)으로 청년 주거안정 지원
- ▶ (충남 청양군) 홀로 사는 노인세대 등에 인공지능(AI) 스피커 보급사업 추진('24.~),

④ 공신력 있는 기관(지방자치단체)에 대한 기부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나눔문화가 확산

※ 기부금 접수현황, 기금사업(사용처) 등에 대한 지자체의 정기적 공시로 투명성 제고

## Q. 최근 공포(2. 20.)된 「고향사랑기부금법」 개정안 주요 내용은?

□ 개정안은 연간 상한액, 모금 방법, 제도 정비, 자료요청 근거 신설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안을 담고 있음

① (연간 상한액 확대)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이 현재 500만원에서 2,000만원으로 확대됨 \* '25. 1. 1. 시행

※ 상한액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 필요

② (모금방법 개선)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으로 기존에 금지되던 전자적 전송매체(문자메시지, SNS메시지 등)와 사적모임(향우회 등)을 통한 모금을 허용 \* '24. 8. 21. 시행

※ 시행령에 횡수, 발송 명의, 수신 거부방법 고지 등 모금방법 세부사항 마련 예정

③ (제도 개선)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처를 지정하여 기부하는 '지정 모금 및 기부'의 근거를 명문화하고(공포일 시행), 현재 일반 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답례품 비용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충당(기부금의 30% 범위 내)할 근거가 마련됨 ('24. 8. 21. 시행)

④ (자료 요청) 행안부장관·지자체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기부자(등록외국인)의 체류지 정보 등 자료제공을 요청(기부자 주소지 확인 필요)할 근거가 신설됨 \* 공포일 시행

⑤ (홍보 책무) 행안부장관·지자체장의 제도홍보 책무가 신설되어 홍보활동 강화 및 법적 근거 마련됨 \* '24. 8. 21. 시행



## IV. 미래산업과 교육

### 4-① 스마트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

#### Q. 스마트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사업 추진일정은?

- 스마트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올해 전문가 등과 지구 조성 사업의 타당성 확인을 추진 중이며,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
- 한편, 전라남도에서 '22.11월부터 '23.7월까지 자체적으로 「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」 연구를 통해 도 유치 당위성 및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 바 있어, 이를 참고할 계획임

### 4-② 기회발전특구

#### Q.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향후 추진일정은?

- 기회발전특구는 중앙의 일률적인 공모 일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, 지방정부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이 가능함
  - \* (지정 절차) 지방정부(시·도지사)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입지 선정 및 특구계획 수립 → 산업부에 지정 신청 → 지방시대위원회 심의·의결 → 산업부 장관이 지정
- 현재 각 지방정부는 투자기업을 유치하고,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정 신청을 위한 준비 중임
  - 관련 지침이 3.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준비된 지방정부의 지정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
  - \* 「기회발전특구의 지정·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(산업부 고시) 시행(3.4~)

#### 4-㉓ 전남형 교육발전 특구

#### Q. 전남형 교육발전특구의 주요 내용은?

- 교육부와 전라남도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특화 인재 양성을 위해 시·군별 지역 주요 산업을 바탕으로 유-초-중-고 대학이 연계한 인재양성을 추진함.
- 촘촘한 지역 연계를 통한 유보 공동교육과 보육으로 다양한 늘봄 학교 운영함.
- 목포·무안·신안의 인적·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무안반도 초중고 공동 교육과정과,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급간 연계 교육을 추진하고, 전남교육 AI, 빅데이터 구축·운영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운영함.
- 시군별 지역 발전전략\*과 연계하여 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정주 생태계를 구축함
  - \* 에너지 중심 혁신도시형(나주), 해양관광 융복합형(목포·무안·신안), 스마트팜 등 미래농생명산업형(영암·강진)
- 또한, 도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 인력 수급 필요성이 대두 되고, 전체 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주 배경자 맞춤형 통합 지원도 추진함.
- 해외 유학생과 이주 배경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언어·문화 교육, 중등·고등 교육과정 해외 인재 유치 및 교육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함

## V. 전남형 수산업 고도화

### ⑤-① '김' 산업 육성 지원

#### Q. 우리나라 김 산업 현황은?

□ 전국 김 양식면적은 약 635km<sup>2</sup> 규모로 양식품종 중 가장 넓은 면적이며, 김 양식 등 해조류 양식어가는 2,043가구('22)임

\* 전국(116만책) : 전남 79.1%, 전북 8.1%, 충남 5.8%, 인천·경기 5.1%, 부산 1.9%

○ 우리 김은 해외에서 웰빙식품으로 각광받으며, 지난해 수산식품 최초 1조원을 돌파하여 7.9억불을 달성하였음

\* 김 수출 추이(억불) : ('10) 1.1 → ('15) 3.1 → ('20) 6.0 → ('23) 7.9

\*\* 김 수출 7.9억불은 지구둘레 52.6바퀴, 여의도 면적의 약 138.2배에 달함

▶ 물김 생산 : (전국) 550천 톤 / (전남) 426천 톤 \* 전국 대비 77%('22년)

▶ 김 수출액 : (전국) '20.) 6.01 → '21.) 6.92 → '22.) 6.55 → '23.) 7.91억 불  
(전남) '20.) 1.67 → '21.) 2.03 → '22.) 1.91 → '23.) 2.48억 불

#### Q. 김 산업 육성 계획은?

□ 해수부는 김산업 진흥구역\* 및 김산업 전문기관\*\* 지정 등을 통해 신제품 개발,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고,

\* '23년 3개소 최초 지정(해남, 신안, 서천) / '24년 2개소 지정 예정 / 개소당 50억원 지원(국비 25억, 지방비 25억)

\*\* (재)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김 산업 전문기관 제1호로 지정('22)하여 김 제품의 품질향상, 신제품 연구개발, 제조 공정별 식품안전성 확보 연구 등 수행

○ 내년에 국내 최초로 완공되는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(1,200억원, '25년 완공)에서도 가공기술, 마케팅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김산업 진흥 추진

□ 앞으로도 전남권 수산식품 수출단지 내에 김산업진흥원 설립하는 방안 등을 통해 생산단계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수출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

## Q. 수산물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개요 및 필요성

- 소비지분산물류센터<sup>FDC</sup>는 산지에서 대량으로 수집한 수산물을 원물 또는 가공 후 소비지로 직접 출하하는 종합 유통시설\*임

\* (필수 시설) 분산·물류시설 및 저온저장고 등, (부수시설) 포장·가공시설 등

- 현재 전남지역 마른김 보관 시설 부족으로 수도권 등에 보관 후 전남지역으로 재이송하여 물류비 2중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함
- 마른김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원료 선별·비축과 가공·보관할 수 있는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건립 지원 검토

### 5-2 중국어선 불법 조업 대응 강화

## Q. 서남해·제주권 해역 중국어선 불법 조업 현황과 향후 대응 계획은?

- 중국어선들은 불법 안강망을 활용하여 주로 9월~다음해 4월까지 야간·기상악화 시 우리 EEZ를 침범하여 어구 부설 후 도주하는 형태의 게릴라식 불법조업\*을 행하고 있음

\* 중국 불법어업 단속현황(건): ('18)258 → ('19)195 → ('20)35 → ('21)108 → ('22)88 → ('23)113

- 이에 해수부와 해경은 대형지도선과 경비함정을 배치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·단속 강화와 중국 정부의 자구 노력을 요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
- 우리 EEZ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식별장치(AIS) 설치\* 및 총톤수증명서 비치\*\*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겠음
- \* '24.1~4월 시범운영 후 '24.5월 이후 정식 운영 예정
- \*\* 허가 시의 어선과 실제 조업어선의 총톤수가 상이할 경우 무허가 등으로 처벌

- 또한, 해경은 서남해·제주권 해역에서 기동전단(대형함 4척, 헬기 1대,

특공대 등) 운영을 통해 고강도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추진 예정

\* 최근 2년('22~'23년) 간 2~4월 목포·제주해역 범장망 불법어구 209통 발견

\*\* 어선 밀집해역 위성 영상, AIS Data 분석, 고정익 감시·채증 등을 통해 합정과 합동단속 추진

### <중국 불법어업 단속 현황>

연도	총계	유형별 적발현황			
		영해침범	특정금지구역 침범	무허가	제한조건 위반 등
2018	258	7	17	25	209
2019	195	9	5	14	167
2020	35	4	2	4	25
2021	108	4	5	23	76
2022	88	4	3	8	73
2023	113	9	3	11	90